

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컨트롤타워,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된다

- 1월 20일(화), 「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국무회의 의결
- 국가·사회가 함께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 본격 추진

【관련 국정과제】 77.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1월 20일(화), 「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
-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‘기본이 튼튼한 나라’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‘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’를 구체화한 것으로,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‘기본사회위원회’의 구성·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.
- 지난 12월 15일 입법예고 하였던 제정안 중 이번에 확정된 「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·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, 법·제도를 개선하며,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·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.
- 저출산·고령화,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,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해 나가고자 한다.
-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·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, 학계 및 일반 국민들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면서,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였다.

- 이밖에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며 당연직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면서 위원수도 상향(40명 → 43명) 하였고, ‘사무기구의 장’에 민간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이 있었다.
- 한편,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 다음날인 1월 21(수),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.
- 복지부·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한다.
- 윤호중 장관은 “기본사회위원회 설치에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”라며,
- “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,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,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치혁신실 기본사회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유지영 (044-205-3651)
		담당자	서기관	박주언 (044-205-3652)

